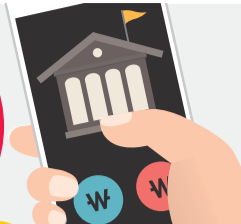




<b>코스피</b> 2097.18 (+32.66)	<b>코스닥</b> 690.39 (+7.30)
<b>금리</b> (연이자율) 1.80 (0.00)	<b>환율</b> (원/달러) 1120.70 (-2.30) (15일)



[뉴스]  
4차 산업혁명이 바꾼  
은행권 지도  
인터넷銀 大戰 2R  
02

## 예멘난민 100명 脫제주 전남 조선소 ‘몰래 취업’

〈단독〉

지난해 사회 문제가 됐던 제주도에 예멘 난민 100여명이 전라남도에서 있는 한 조선소에 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 근로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에 있지만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전남 조선소 협력업체서 고용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중 100여명이 제주도에서 나와 현재 전남의 조선업체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선소의 30여개의 협력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소 협력사 30여곳서 용접 등 업무로 난민 고용

### 해당 군청 난민 이주사실 몰라 향후 이탈 등 관리감독 우려

조선소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지난 하반기 이들 난민 100명을 고용했다”며 “그러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난민들은 큰 문제없이 업무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며 “간혹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제주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제주도 출입국 관리소 난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난민 심사 결과 후 현재 270여명이 내륙으로 이동해 모두 정상적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취업허가를 받고 있다.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 관심 가질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 중 4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4월 30일 제주도에 육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6월 1일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조치를 내리면서 추가적인 예멘 난민의 입국은 중단됐다.

현행 난민법을 보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난민 신청을 하면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10월 2차 심사에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판단 보류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는 내용의 예멘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은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 종료는 14명으로 결정됐다.

제주도 출입국 관리소 난민청 관계자는 “현재 조선소에 취업한 예멘인에 대해 대표자를 선정해 비상상황, 각종상담,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업체 관계자와도 수시로 연락하여 특이사항에 대한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목포(전남)-양성운·정연우 기자 ysw@metroseoul.co.kr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이미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협력사 상생, 좋은 일자리, 설비투자 증대

# 文, 기업총수에 숙제 가득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

### 대기업·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중기와의 상생’ 최우선 강조 청년 위한 ‘좋은 일자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대화는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대통령의 두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첫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준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 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재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만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언급한 뒤 “(올해는)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 (또) 좋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용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주요기업들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한편 대기업·중견기업인 및 중소·벤처기업인들 만난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관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김영환 민노총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노총과의 토론 형식의 대통령 면담을 오는 2월 중 진행하도록 검토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이해찬 대표 만난 금투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강력 요구

### 금투업계 현장 간담회

여당이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증권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방안에 대해 금투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간담회는 이해찬 대표와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들의 첫 상견례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연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

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대변인 및 자본시장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재 NH투자증권 대표, 전영목 삼삼자산운용 대표 등 증권사 14개사와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미국 엔젤클럽을 보니 12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투자관행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영국, 미국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소하다.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